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몸통,  
박근혜의 '관심 법안' 추진하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규탄한다.**

- 일시 : 2016년 11월 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첨부]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몸통,  
박근혜의 ‘관심 법안’ 추진하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규탄한다.**

□ 사회 : 김재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진행순서

○ 여는 말

-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국장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몸통, 박근혜의 ‘관심 법안’ 추진하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규탄한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다
- 박근혜-최순실과 전경련 거래법, 재벌특혜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절대 안돼!!
-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반대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 이후 사실상 대통령의 측근들이 국정운영을 불법적으로 좌지우지해 왔다는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과 경악의 와중에 박근혜-최순실이 재벌과 전경련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규제완화법, 재벌특혜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입법이 저지되었으나,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에 의하여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으며, 바로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야 할 이 시점에 박근혜-최순실이 재벌의 청탁을 받아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며, 이 법들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촉구’ 의견서에 의하면 안중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재벌기업에게 최순실이 주도한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요구할 당시, 전경련과 재벌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악법 등의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재벌들이 미르재단이 설립된 지 약 2개월 만에 486억 원을 모금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 13. 직접 대국민 담화에서 “최대 6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라고 언급하며,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직접 서명운동에 동참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재벌들과 비선 실세의 정경유착이 얽혀 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사실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그 법의 실상은 재벌특혜법,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 파탄법이다.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서비스산업 전체를 포괄하여 업종별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 계획수립, 추진점검 등 일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수급권, 자기정보결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도 다르지 않다. 규제프리존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민사회의 반대에 막혀 통과가 좌절되자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을 끼워 넣어 시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지역 버전이다. 보건, 의료, 환

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일상생활, 생명과 안전, 경제민주화, 교육균등 등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업실증특례’라는 제도를 통하여 기업이 개별적으로 요구하고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점을 실증한 경우, 광범위한 규제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옥시의 가슴기 살균제 참사에서 기업이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한 경우에서 보듯, 눈앞의 투자이익에 급급한 기업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한을 떠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환경, 정보인권 등 특정 지역의 규제완화의 폐해는 순식간에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모든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또는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에 계획수립, 심의의결 등 최고 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처가 이를 실행하도록 하여 사실상 모든 부처를 기획재정부에 종속시키고 있다. 이 법들이 통과되어 의료, 교육, 금융, 유통, 환경, 사회서비스, 방송통신 등 공공성을 유지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서비스 분야조차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도 하에 정책이 추진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 무분별한 개발, 친재벌적 정책추진은 물론 경제민주화 정책 폐기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의하여 유린당해 온 이 정권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공성 확대에는 관심없고 오직 소수 재벌, 대기업, 자본 및 자신의 측근들을 위한 돈벌이 정책만을 추진해 왔다. 이를 바로잡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작금의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마저 통과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 정책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될 것이며, 이는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은 이 피해는 대다수의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제2의 세월호, 가슴기 참사를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하라!
- 국회는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을 야기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발의를 철회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협조말라!

2016. 11. 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